

‘지방 살리기’ 100조 투입

정부, 초광역개발권 개발... 4대강 정비 본격 ‘시동’

목포·무안·신안 서남권 신발전지역 지정

지방 이전 기업 세금 감면 10년으로 연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이 투입된다.

특히 목포시와 무안, 신안군 일대가 서남권 신발전지역으로 시범 지정되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현재의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토 구조가 대외개방형으로 개편돼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내륙 중심의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2단계 대책에 투입될 예산은 약 42조원으로, 앞서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원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100조원에 이르고 위임회 측은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조원을 투입, 대대적인 지방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에 목포와 무안, 신안 일대 1천216km를 신발전지역으로 시범 지정해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수도권 기업 이전시 이전보조금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4조원의 예산을 들여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163개 시·군 지역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5조원을 투입,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산업 활성화, 지역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보면 크게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

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된다. 이런 4대 축과 함께 해안과 내륙 간 연계를 위해 기업·혁신도시 및 R&D(연구개발) 거점도시 중심의 내륙특화벨트도 검토된다.

기초생활권은 전국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대도시권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개발 측면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방소득세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광역발전 추가 계획안,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 기초생활권 계획 등을 담은 3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성금 내고 배·사과 가져 가세요”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들이 15일 광주시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구세군과 함께하는 2008 사과·배 겨울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회원들은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과와 배를 무료로 나눠주며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지방예산 114조 상반기 쏜다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인 114조원이 쏜다.

행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 등의 연간 사업 가운데 90% 이상을 발주하고, 지방예산 190조원 가운데 60%인 11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지방예산 집행률은 올해의 3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나

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내년 예산을 이달중 배정해 각종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해 입찰기간을 기존의 평균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수의계약 대상 사업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개선해 해외 경비와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줄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내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예년의 5~6월에서 4월 이전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소규모사업의 예산 집행권한을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위임하기로 했다.

지방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한편 업체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금 선지급 하한비율도 현재 20~30%에서 30~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2’ 재조정 없어 지역민 반발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 사업 추진 시기 등 빠져 ‘속 빈 강정’

정부가 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기존 정책들이 다수 포함된 데다 사업 추진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호남 소외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권역 재편을 촉구해온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조정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에 포함된 광

주~완도간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목포~광주~익산~오송) 완공시기 조정 등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대 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초광역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 검토 대상’에 포함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이미 국책사업으로 채택돼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호남 고속철도 건설사업도 조기 완공이 광주·전남지역 최대 과제임에도 완공 시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J프로젝트, 광양항 자유구역 확대 등도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

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완료 시기를 명시한 게 아니라 ‘중장기 프로젝트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 오히려 사업 추진의 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 대상 및 내용, 추진시기,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정책에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영선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5+2 경제권 구상에 대한 권역 재설정 등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광역경제권 사업 불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으로 제시한 지방 이전 기업 지원방안도 단지 기존 정책의 수혜폭을 확대한 정책이라

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를 2배 이상 확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책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 이번 대책에는 실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된 지역의 산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인프라 확충 등은 누락돼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2 수능 1과목 축소...수리 출제 확대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어 든다.

그러나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2 학년도 수능 시험 체제 개편안을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수학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대 응시 가능한 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최대 응시 과목수를 2과목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국·영·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사회·과학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3과목에 사회 또는 과학탐구영역에

서 최대 3과목,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과목 등 총 7과목으로 현재보다 1과목 줄어든다.

수리 영역의 출제 범위는 이공계 지원자가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은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인문계 지원자가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은 ‘수학I’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으로 바뀐다.

현행과 비교해 수리 가형에서는 선택과목 중 ‘이산수학’이 없어지는 대신 기존 ‘수학II’ 과목 안에 들어있었던 ‘기하와 벡터’가 별도 과목으로 신설되고 수리 나형은 기존의 ‘수학I’ 외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과목이 새로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 및 2008 '조대인의 밤' 송년행사
-특별대담-
2008년 송년특별 대담 40주년 30주년 20주년 10주년 5주년 1주년
2008년 12월 16일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장소: 2008년 12월 16일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문의: 062-220-1111 ~ 220-2222

우리키? 아이키?
성장클리닉
374-1075-6

PHILIPPINES BURANA PROJECT
뉴스에도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www.kwangju.com